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상상변주곡”

1회 4월 26일 (목)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몇 가지 성찰과 비판 발제 : 도정일 (문화평론가, 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2회 5월 3일 (목)	우리에게 ‘우리’ 는 무엇인가 발제 : 진중권 (문화평론가, 중앙대 겸임교수)
3회 5월 10일 (목)	진보문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 발제 : 북거일 (소설가, 미래문화포럼 대표)
4회 5월 14일 (월)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내면 풍경 발제 : 임상수 (영화감독, 〈그때 그 사람들〉, 〈오래된 정원〉 외)
5회 5월 17일 (목)	지난 20년의 ‘소설’ 을 다시 읽는다 발제 : 심진경 (문화평론가, 「문예중앙」 편집위원)
6회 5월 23일 (수)	진보 운동과 민족문화 운동의 새로운 모색 발제 : 김명인 (문화평론가, 인하대 교수, 「황해문화」 주간)
7회 5월 31일 (목)	세계화 시대에 구상하는 진보 운동의 문화 전략 발제 : 조정환 (문화평론가)
8회 6월 7일 (목)	민주화 20년, 철학적 사유의 변화와 모색 발제 : 이진경 (철학자, 서울산업대 교수)
9회 6월 8일 (금)	발제자 8인의 종합 원탁토론

주최 및 주관 :  

공동 기획 및 진행 : 문화단체 

1회 :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몇 가지 성찰과 비판

도정일 (문학평론가, 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1. 의미

금년은 1987년 군부 집권을 지속시키려던 전두환 정권의 기도를 시민의 힘으로 좌절시킨 '6/10 민주화 대항쟁' 발발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이보다 27년 전인 1960년의 4/19 학생봉기에서부터이다. 4/19 봉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무너 뜨리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장면 정권을 탄생시키기는 했으나 그 주도 세력이 '학생'들이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4/19 봉기에 의한 민주화의 성과가 단 1년으로 끝나고 1961년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의 등장 앞에서 허망하게 그 성과를 반납해야 했던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봉기의 주도 세력이 광범한 시민 계층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민주주의는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긴 시일에 걸친 안착, 착근, 발전의 단계들을 요구하는 지속적 과정이다. 이 과정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적 열망'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이다. 이 두 가지 기본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좌절, 퇴행, 반전의 위기에 늘 봉착한다. 1987년의 민주화 대항쟁은 4/19 봉기와는 달리 시민세력이 항쟁을 주도하고 광범한 시민 계층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적 열망의 '있음'과 그 열망의 폭발적 크기를 보여준 사건이다. 1987년은 현대 한국이 국가 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 할 '시민의 탄생'을 목격하고 기록한 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국민'은 탄생했으나 그 국민은 1987년에 와서야 근대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2. 착각

그런데 그 민주시민은 오늘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꿈꾸며 있는가? 그의 언어는 지금 어떤 문법, 어떤 열망의 코드로 조직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시민적 능력은 어찌 되었는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상당수 한국인들이 채용하는 어법은 가당찮게도 "이제 민주주의는 되었다"라는 것이거나 "민주주의는 이제 웬만큼 되었으니"라는 것이다. '민주화 20년'이라는 표현 속에도 우리가 20년 전 1987년에 한번 세계 떨치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이후 20년 만에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런 어법과 태도는 극히 위험한 착각과 터무니없는 자만에서 나온다. 세계 어디에도 20년 만에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완성과 종료의 지점이 없는 '긴 과정'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마라톤에는 종착점이 없다. 1987년 이후 20년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근사한 문민정부들을 실현한 지는 이제 겨우 15년에 불과하다. 그 15년 동안 우리가 세 번의 문민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화를 향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온 것은 분명 성취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성과가 "이제는 다 되었다"는 식으로 감히 민주화의 완성과 종결을 선언해도 될 자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의 힘겨운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지 어떤 수준에서

도 민주화의 완성을 말할 단계에 있지 않다. ‘민주화 20년’이라는 표현의 정당한 의미는 ‘민주화 지향 20년’이고 ‘민주화 추진 20년’이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과제’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시민적 능력의 첫째 조건이다. 시민이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몰락과 반전의 위기를 만난다.

3. 문화적 결손

민주화의 문맥에서 지난 20년의 문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문화를 얼마만큼 일구어왔는가라는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 되지 않는다. 건국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에 법이 없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은 근대적 민주헌법이었지만 그 헌법 덕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그것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민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시민적 능력(civic virtues)들로 구성되고 그 능력들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일체를 포함한다. 시민적 능력, 혹은 시민적 덕목에는 자유, 평등, 공존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존중의 능력, 인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제 가치들에 대한 믿음과 실천, 비판적 사유의 능력과 이성적 판단력, 공익과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런 능력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의 토대이다. 우리는 흔히 시민의 사회적 실천 영역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쪼개어 말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문화랄 때의 문화는 ‘문화’라는 이름의 어떤 한정된 영역이나 예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시민의 가치관, 태도, 행동방식을 안내하는 화살표이고 규범이며 강령이다. 이런 문화가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이고 그 토양에 붙여지는 이름이 ‘시민문화’이다. 시민문화의 토양이 일구어지지 않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지탱과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 혹은 성숙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문화를 만들어보려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화는 아주 취약하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들로서는 민주주의의 문화를 일구는 데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3대에 걸친 문민정부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으로서의 민주적 문화를 다지는 데 투입한 정책적 노력, 장기 비전과 계획, 시민교육투자 등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민정부 3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 여부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크게 걸려 있다는 사실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그 성숙에 필요한 문화정책들을 세우고자 노력한 정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사회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배적 언론조직들과 대학들을 보라. 지배적 매체조직들이 공정성, 품위, 객관성의 가치를 포기하고 허위에 대한 혐오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한국 언론의 일대 스캔들이다. 내가 아는 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적 덕목 교육을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과정에 포함시켜 필수과목으로 삼고 있는 대학은 없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나라의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일에 이토록 무관심할 수가 없다. ‘민주화 20년, 문화 20년’을 주제로 내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관심 결여와 노력 부재를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화적 결손’으로 지적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4. '공포의 문화'와 '지향상실'

지난 20년의 민주화 진행 과정에 등장한 문화적 변화들 가운데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현상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공포의 문화'(culture of fear)이고 다른 하나는 '지향상실'(disorientation)이다. 공포의 문화는 '삶의 안정적 영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시키는 정신적 공황상태'이다. 이 정신 상태를 특징짓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한국인을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한 사건 혹은 요인들은 아이엠에프 위기, 시장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직업 안정성의 심각한 동요, 빈부 양극화의 심화 등 세 가지다. 이 요인들은 모두 문민정부 3대의 집권 시기에 해당하는 지난 15년 사이에 발생하거나 심화된 것들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은 자기 삶의 안정, 가족의 안녕, 소속 집단의 미래 등이 항시적 불투명성 속으로 빠져드는 위기를 경험했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다른 모든 관심을 압도하는 제1의 관심사, 이해관계, 목표가 되기에 이른다. 불안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제1원리이다. 불안이 개인의 심리를 넘어 '집단적 정신상태'(collective mentality)로 발전하고 그 정신상태가 사람들의 행동, 선택, 가치, 목표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이 '공포의 문화'이다. 공포의 문화가 집단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확산될 때 개인들의 삶의 플롯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제1의 목표는 '생존', 곧 '살아남기'이다. 아이엠에프 때 지하철 역사로 몰린 '노숙자' 이미지가 한국인에게 심어준 것은 연민의 정서가 아니라 순수한 공포이며, 자기 자신의 실직과 몰락의 가능성("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두려움이다. 공포의 문화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의미하다. 노숙자에게 '정치적 자유'는 아무 의미도 없다. 자기 자신 '사회적 열매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 상당수 한국인들이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도 공포의 문화가 초래한 결과의 하나이다. (공포의 문화는 사회의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이념적 정치적 텃밭이다.)

'지향상실'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을 결속시킬 공유의 가치, 집단적 목표, 사회적 지향의 상실'이다. 민주주의는 가치, 사상, 표현, 주장 등 문화적 창조행위에서 무엇보다도 다양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체제이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다양성의 원리만으로 지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회구성요소들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묶어주고 결속시킬 공통의 가치, 삶을 안내할 공유의 목표,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 목표, 지향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회성원들의 유대와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바탕, 곧 '공동성'(commonality)이다. 다양성이 '다름'에 무게를 둔다면 공동성은 '같음'에 힘을 실어준다. 차이를 강조하는 다양성과 유사성 혹은 같음을 강조하는 공동성 사이에는 일정한 창조적 긴장이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문화적 원리, 공동성은 사회적 원리라는 식으로 양자를 대립관계에 놓을 필요는 없다. 두 원리는 모두 문화적 원리이다. 문화는 차이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공동성의 체계이다.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익추구가 만발하는 민주사회일수록 공동체적 결속과 유대는 필요하며 이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 공동성이다. 공동성의 공급자는 문화이다. 우리가 타인, 타 민족,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함께 나누는 어떤 공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동성은 이해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원리이다.

민주사회에서 공동성의 제 가치들은 정치적으로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동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은 '문화적 가치'이다. 문화적 가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며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등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하며 해답을 모색하게 한다.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답변이 모색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문화성찰의 관점에서 말하면,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들을 잊고 산 사회에 속한다.

특히 세계화의 요청과 시장원리주의가 한국 사회를 나포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 거의 유일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시장논리와 시장가치를 말하고 경제논리와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여러 공영역적 국면들을 살펴야 하는 정부, 각자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 방식으로 조직해야 할 시민들, 거기다 사회의 비경제적 영역들까지도 경제적 가치의 ‘유일가치화’에 합세하고 그게 마치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신의 명령인 것처럼 그 앞에 었드린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목불인견의 참상’에 방불하다. (우리 기획예산처 관리들의 전형적인 질문 하나: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무엇이나?”)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경제적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유일가치화’이다. 이 유일화의 한국적 정도는 가위 경제가치의 ‘유일신화(化)’에 가깝다.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적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무용론이 아니다. 사회발전의 견인차는 경제발전이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만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다. 경제발전은 오히려 비경제적 가치들, 문화적 가치들, 인간적 가치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만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의 엔진이 된다. 경제발전은 사회의 목표가 아니다. 사회의 목표는 (좀 느슨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이다.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강력한 지향이 ‘민주화’였다면 지난 20년간 그 지향의 에너지가 식으면서 그 대신 자리를 차고 들어선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한 속도로) 것이 ‘행복 이데올로기’이다. 이 행복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행복의 수단, 모델, 목표로 떠오른 것이 부자아빠, 잘 나가는 사람, 씨이오, 미모처럼 ‘돈’ 혹은 시장가치나 경제적 가치에 직결된 것들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행복 자체가 사회의 목표일 수는 없다. (행복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공포의 문화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5. 시장, 문화, 교육

지난 20년은 한국에서 ‘시장의 시대’가 열린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시장과 문화 사이의 관계 양상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이 부분을 짧게나마 성찰하는 일은 이 토론회의 정당한 화제일 수 있다. 다음은 그 성찰의 시작을 위한 몇 개의 노트이다.

가) 시장은 문화에 활력을 주었는가?

표현형식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보면 지난 20년은 문화예술 영역이 상당한 활력을 얻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활력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 활성화의 결과라고 말하는 데는 신중한 유보가 필요하다. 문화적 표현이 활력을 얻게 된 것은 ‘자유’의 신장과 깊은 관계에 있다. 특히 문학, 미술, 영화, 만화, 가요 등의 예술 분야에서 창작자들을 오랫동안 움아매고 족쇄 채워온 ‘검열제도’가 문민정부 15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된 것은 문화적 활력의 소생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된 곳에서 문화는 활기를 가질 수 없다. 이 점에서 문화적 표현의 활성화는 ‘민주화’의 한 효과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있거나 좀체 언급하지 않는다.

나) 시장전체주의의 진행과 독창성의 위기

시장과 문화의 관계를 말하는 데 필요한 성찰의 대상은 ‘시장’ 메카니즘이 문화발전에 끼치고 있는 영향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동기는 ‘이윤’이다. 그러나 이 이윤 동기는 문화예술에 필요한 동기의 문법과는 맞지 않다. 자본주의 시대의 전개 이후 예술이 ‘상품’의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첫째, 시장논리와

시장가치의 유일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문화예술품의 생산과 유통에서도 이윤동기와 시장논리가 제1의 명령으로 가동되고 그 결과 ‘장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타산적 구분이 문화예술생산에서도 지배적인 ‘선택법칙’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장이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시장전체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 하에서는 다양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다. 장사되는 것 쪽으로의 ‘쏟림’을 시장 메카니즘으로서는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쏟림 현상만이 아니다. 시장은 ‘트렌드’를 좋아한다. 장사된다고 입증된 생산물의 무자비한 표절, 베끼기, 모방, 추수 등 이른바 ‘카피캣’(copycats)에 의한 ‘트렌드’ 조성 현상이 쏟림 현상과 결합한다. 그러나 적어도 예술의 경우 ‘트렌드 따라가기’는 예술창작의 동기도 본능도 아니다. 시장이 문화예술생산과 유통에 주는 이런 영향들은 예술적 창조성, 특히 ‘독창성’의 가치를 크게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창조적 능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독창적 재능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한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위에 지적된 것과 같은 시장 메카니즘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제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장전체주의의 위험성이다. 과거 우리가 정치독재와 권위주의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경험했다면 지금은 시장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우려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전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자유(여기에는 정치자유와 언론자유도 포함된다)의 제한은 비강제성 혹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억압보다도 그 성격이 더 사악하고 교활하며 음흉하다. 시장체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일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문화적 성찰은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이에 놓인 이런 딜레마를 딜레마로 직시해야 한다.

다) 산업논리, 게임문화, 페인 신드롬

라) 네티즌 민주주의와 그 위험: 반지성주의

마) 한국 교육의 자기 배반

6. 집단주의 문화의 변용발전 (구두 발표)

- 조승희 사건에 대한 한국적 반응의 분석
- 보여주기, 타자의 시선, 외부와 내부
- 영웅과 반영웅: ‘대표선수’ 신드롬
- ‘정서적 연좌제’
- ‘대한민국주의’의 대두: 정체성의 허상
- ‘한류’ 문제

7. 성찰과 희망

(구두 발제)